

한국 국익 개념 재정립을 위한 시론*

주 장 환**

•요 약•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이 집권할 수 있는 체제인 한국에서 상이한 집권 세력이 표방하는 국익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같다면 논리적이지 않다. 또 다르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이 글은 특히 두 번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국익 재정립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글은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국익을 재정립하기 위해 필요조건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 1단계는 재정립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 국익에 대한 메타이론 차원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 글이 정립하고자 하는 국익 개념의 특징을 구체화한다. 이 단계에 대한 내용은 주되게 제 2장에서 다룬다. 2장에서 정리된 이 글의 국익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제 2와 3단계 즉 국익에 대한 ‘개념화(conceptualization)’과 ‘유형화(typification)’를 진행한다. 이 글은 이 두 개념화와 유형화는 특정 개념 즉 이념형이 실제 사례와 만날 수 있는 가교라는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개념화는 분석 대상이 위치하는 좌표축 즉 속성 공간을 설정하는 것이고, 유형화는 속성들간의 조합을 통해 이 속성 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기존 국익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화 및 유형화 사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한국 국익 재정립을 위해 최적화된 모델 즉 2차원 8변수법을 선택 및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이 글의 논의와 주장에 대한 정리와 그 함의를 도출한다. 또 구체적으로 한국의 국익 재정립과 관련된 향후 연구의 과제를 정식화한다.

주제어 : 한국, 국익, 재정립, 개념화, 유형화, 2차원 8변수법

* 이 논문은 2026년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동아시아 통상학 전공 교수 / 유라시아연구소 소장

I. 서론

‘국익 중심의 실사구시 실용외교’와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일견 동일한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는 한국 윤석열, 후자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의 기조이다.¹⁾ 그렇다면 이 두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두 경우 모두 일정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이 두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국익이 같은 경우, 방법론 즉 실용주의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정책이 다른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일례로 이 두 정부의 대 북한 정책은 ‘적대’와 ‘유화’로 그 속성을 구분할 수 있다.²⁾ 따라서 동일한 국익과 방법론 하에서 상이한 정책이 산출됐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가정이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실적으로도 서로 다른 국정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경쟁하여 집권을 하는 것이 보장된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감안한다면 상이한 이념과 목표를 가진 정부가 국익이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다음으로 이 두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국익이 다르다고 가정하는 경우, 보다 실제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두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국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불분명하다는 근거는 한국의 역대 정부 중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그 어떤 역대 정부도 국익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³⁾ 또 현재의 이재명 정부도 그들의 국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원칙 없는 실용외교’를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

이 글은 위의 두 상황 모두 비정상적이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출발한다. 먼저 한국의 정치체제의 발전의 측면에서 비정상적이다. 한국은 주지하다시피 상이한 지향과 목표 그리고 정책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평가받고 일정 기간의 국정 운영의 권한을 위임받는 체제이다. 이런 한국에서 국익이 각 정치세력간의 합의가 존재하여 동일하

1) 국가안보실. 2023.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서울: 국가안보실, 13-15; 대한민국 정부. 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정부, 197-200.

2) 박은경. 2025.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역대정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11권 제2호,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33-48.

3) 한용섭. 2025. “역대 한국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비교·분석과 개선방향”, 『국가전략』, 제31권 제1호, 세종연구소, 44-45.

4) 이태규, “실용이란 유행에서 벗어나기 (2025.06.3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3017490002646>(검색일: 2025.11.03.); “시험대 오른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4778>(검색일: 2026.01.05.).

다거나 혹은 각 정치세력이 특정 시기의 자신들이 추구하는 국익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발전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의 한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마치 공통되고 합의된 국익이 있는 것을 가정하는 이 보고서에서 밝힌 외교정책의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국민적 컨센서스와 정당 간 합의는 먼저 한국의 제 정치 세력들이 지향하는 국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⁵⁾

다음으로 한국 외교의 체계성과 그 정책결정과정의 과학화의 측면에서 비정상적이다. 목표가 부재 혹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즉 전략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을까? 또 그 과정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의 극복이 ‘서사는 없고 수사만 난무하는’ 한국 외교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이는 미국 등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⁶⁾ 국가의 목표는 국가가 추구하는 바인 국익을 구체화시킨 것이고 그 방법이 전략이라고 했을 때, 주요시기에 따라 국익을 재정립하는 것은 외교의 체계성 확보와 그 정책결정과정의 과학화 제고를 위해 매우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상술한 배경과 문제의식 하에서 현 시기 한국의 국익을 재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국가의 이익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서, 보다 엄밀한 국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최근의 ‘탈-탈 냉전기 초입부’라는 시기적 특성은 이 작업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 시기의 국제질서는 탈 냉전기와는 질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그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냉전, 초냉전, 다극, 무극 등 여러 견해가 경합하고 있다.⁷⁾ 이는 초입부라는 시기적 특성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탈-탈 냉전기의 속성은 여전히 형성 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2025년 이후 국제질서는 급속하게 그 거래주의적 속성이 강해지고 있다.⁸⁾ 거래를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이익이 무엇

5) 이 최근의 보고서는 국회외교안보포럼. 2025.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서울: 국회안보포럼, 국회미래연구원을 가리킴.

6) 김동은. 2020. “한국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 비교 연구: 체계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의정논총』, 제 15권 제1호, 한국의정연구회, 317-344.

7) J. J. Mearsheimer. 2021. “The Inevitable Rivalry: America, China, and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Foreign Affairs*, Vol.100, no.6, 48-58; McNally, Christopher A. “Trade War 2.0?(2020.05.27.)”, <https://www.chinausfocus.com/finance-economy/trade-war-20/>(검색일: 2023.05.12.); Amitav, Acharya, 2018. *The End of American World Order*, Cambridge: Polity Press; Richard, N. Haass, 2017. “The Age of Nonpolarity: What Will Follow U.S. Dominance”, *Foreign Affairs*, Vol.87, no.3, 44-56.

8) Mori, Satoru. 2025.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s Foreign Engagement and Its Geostrategy

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켈위(interregnum)적 성격이 강한 탈-탈냉전기 또 단기적으로 거래주의 경향이 강력해지는 시기에 한국의 국익을 재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국익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론적 논의로서 주되게 그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는 데 집중한다. 재정립을 하기 위한 전제는 국익은 고정되지 않고 변화가능하며,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⁹⁾ 구체적으로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국익을 재정립하기 위해 필요조건을 확보하고자 한다.¹⁰⁾ 제1단계는 재정립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 국익에 대한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 등 메타이론 차원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 글이 정립하고자 하는 국익 개념의 특징을 구체화한다. 즉 이 글에서 정립하고자 하는 국익은 기존 견해를 단순 조합하거나 재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향과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 대한 내용은 주되게 제2장에서 다룬다.

2장에서 정리된 이 글의 국익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 제 2와 3단계 즉 국익에 대한 ‘개념화(conceptualization)’과 ‘유형화(typification)’를 진행한다. 이 글은 이 두 개념화와 유형화는 특정 개념 즉 이념형(ideal type)이 실제 사례와 만날 수 있는 ‘가교(bridge)’라는 견해에 동의한다.¹¹⁾ 또 개념화는 분석 대상이 위치하는 좌표축 즉 ‘속성 공간(attribute space)’을 설정하는 것이고, 유형화는 속성들간의 조합을 통해 이 속성 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¹²⁾ 기실 이 제2와 3단계는 기존 비교정치 연구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개념 정립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¹³⁾ 따라서 이 글의 주요 관심사인 국익을 예로 들면, 개념화는 국익의 핵심 구성요소들을 정의하고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유형화는 이 구성요소들 간의 조합을 통해 실제 사례에 적용 가능한 세부 유형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oward the Four Regions”, *Asia-Pacific Review*, Vol.32, no.1, 54-79.

- 9) J. Weldes. 1996. “Constructing National Interest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2, no.3, 264-286; 秦亚青. 2012. 『关系与过程：中国国际关系理论的文化建构』, 上海：上海人民出版社, 6-8.
- 10) 한국 국익 재정립의 충분조건은 이 글의 분석 결과인 국익에 대한 개념화와 유형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례에 적용하여, 현 시기의 국익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함.
- 11) John, C. McKinney. 1969. “Typification, Typologies, and Sociological Theory”, *Social Forces*, Vol. 48, no.1, 10-11.
- 12) Paul F. Lazarsfeld. 1937. “The Use of Detailed Interviews in Market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Vol.2, no.1, 137-138.
- 13) A. Lijphart. 1977. *Democracy in Plural Societies: A Comparative Explor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K. D. Bailey. 1994. *Typologies and Taxonomies: An Introduction to Classification Techniques*, New York: Sage Publications.

이 글은 이렇게 이 세 단계의 논의의 과정을 통해 국익 개념을 정립하여 현 시기 한국의 국익 재정립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 글의 논의와 주장에 대한 정리와 그 함의를 도출한다. 또 구체적으로 학술 및 정책적 차원에서 한국의 국익 재정립과 관련된 향후 연구의 과제를 정식화한다.

II. 국익 개념을 둘러싼 쟁점

이 장에서는 국익 개념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동시에 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진행하여 이 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국익에 대한 개념화와 유형화의 기본 입장으로 정식화한다. 대부분의 개념에 대한 논쟁과 유사하게, 메타(meta) 이론의 주요 구성 요소인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 차원에서 쟁점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존재론(ontology) 차원에서 국익에 대한 입장과 논쟁은 실재론과 비실재론간의 그것과 유사하다. 즉 국익의 객관적 실체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실재론적 입장을 가진 국제정치 이론의 현실주의자들은 국익은 권력으로 정의된 이익으로 규정하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¹⁴⁾ 반면 비실재론적 입장을 가진 현실주의의 국제정치 이론가들은 국익은 모호한 상징에 불과하며, 주관 및 규범적 선택의 문제라고 그 실재성을 부정했다.¹⁵⁾ 이후 이 입장은 국익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으로 계승되고 있다.¹⁶⁾

그렇다면 국익은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과학철학의 방법론중 하나인 어떤 현상이나 경험이 가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역행 추론하는 ‘초월적 논증(transcendental argument)’은 이 문제를 푸는 데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¹⁷⁾ 즉 국익의 실재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사실은 사실상 국익이 존재함을 방증한다. 만약 극단적인 상대주의와 해석주의적 입장과 같이 국익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통일되지 못한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실재가 없다

14) H. J. Morgenthau, 1973.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5th ed.)*, New York: Alfred A. Knopf, 4-10.

15) A. Wolfers. 1962. *Discord and Collaboration: Essays on International Politic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47-165.

16) A. Wendt,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1-233.

17) D. Elder-Vass. 2015. “Of Babies and Bathwater. A Review of Tuukka Kaidesoja Naturalizing Critical Realist Social Ontology”, *Journal of Social Ontology*, Vol.1, no.2, 327-331.

라고 주장한다면, 그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다.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과 패전국들의 지도자들은 모두 다양하게 이해한 국익 추구를 목적으로 참전했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승패를 국익과 결부시켜 평가한다면, 이 다양한 국익에 대한 이해가 그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물론 경직된 실재론자들처럼 국익의 개념은 하나이고, 절대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익은 실재하나, 그것을 지각하는 행위자들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¹⁸⁾

다음으로 인식론(epistemology)차원에서도 국익 개념을 둘러싼 논쟁은 존재론의 연장선 속에서 평행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국익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존재론적으로 실재론의 입장에 서있는 현실주의 계열의 학자들은 실증주의적 전통에 입각해 국익을 분석적 개념(analytical concept)로 설정하고 GDP나 군사력 등 객관적 지표로써 조작적 정의를 통해 그 측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¹⁹⁾ 반면 비실재론적 구성주의 계열의 학자들은 국익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고 정책 결정자들의 언어로 구성해낸 ‘지적 도구(intellectual tool)’이거나 ‘담론적 구성물(discursive construct)’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⁰⁾ 이런 상황에서 이 쟁점 즉 국익에 대한 인식론 차원에서 어떤 입장이 타당한가?

인식론적 차원에서 국익을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존재론과 인식론간의 암묵적인 평행선적 연관관계를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대표적인 견해들은 존재론 차원의 실재론과 비실재론이 인식론 차원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논리적으로 그 연관관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친화성을 보일 수는 있고 또 그러하지만 존재론에서 실재론적 입장을 취하더라도 인식론에서 상대주의적 견해에 입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논단을 전제로 한다면 상기 편향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태도로 국익에 대한 인식론적 입장을 모색할 수 있다. 즉 실증주의가 표방하는 절대주의적 인식론 즉 측정 가능한 변수들의 결과로써 국익을 인식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흙적 인과성(Humean causality)’의 한계에 직면한다. 즉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존재론적 납작함(flat ontology)’,

18) J. Joseph. 2012. *The Social in the Global: Social Theory, Governmentality and Glob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88-95.

19) J. N. Rosenau. 1971.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New York: The Free Press, 239-248.

20) P. T. Jackson. 2011. *The Conduct of Inqui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hilosophy of Sci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Worl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112-119.

원인과 상관관계의 혼동, 사회 현상을 자연 현상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나타나는 개방 체계의 무시라는 비판에 무기력할 수 밖에 없다. 모래 위에 성을 짓겠다는 발상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국익에 대한 인식은 상대주의인 것이 타당하다.²¹⁾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익에 대한 인식의 상대성은 현상적이지만 본질적이지는 않다. 구성주의가 입각하고 있는 국익에 대한 상대주의적 인식론은 비실재론적 존재론과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결합하면서 인식을 존재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기후 위기를 국익의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후 위기가 국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아닌 것이 아니다. 즉 국익에 대한 다양한 인식 중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것을 모색해야한다는 의미이다.²²⁾ 부연하자면 국익에 대해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채택한다 할지라도, 어떤 담론과 인식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국익의 실제 작동 기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하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럴 때 만이 표면적 현상 근처에 존재하는 심층적 원인을 찾아내는 과학적 탐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익 개념은 가치론(Axiology) 차원에서도 두 가지의 양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실주의 계열의 이론가들은 공적과 사적인 이익의 근본적인 다름에 기반하는 ‘이원적 도덕 기준(dual standard of morality)’에 입각해서 국가 생존이 최고의 도덕이라는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익 추구 행위에 보편적 차원의 도덕적 기준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²³⁾ 또 기본적으로 부정부적 성격을 가진 국제사회에서 그 질서를 지키는 행위가 개별 인간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²⁴⁾ 즉 도덕 이전의 생존의 문제로 국익을 바라본다.

반면 자유주의 내지 규범주의 계열의 이론가들은 국익 추구도 인권, 정의, 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하위 범주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와 도덕의 단위 역시 국가가 아닌 개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국제관계는 자연 상태가 아니며 국가 역시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주체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²⁵⁾ 또 역사적인 사례나 근거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국익 추구도 도덕적 가치와 병행되어야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21) M. Kurki, 2008. *Caus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claiming Causal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5-148.

22) C. Wight, 2006. *Agents, Structur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s as Ont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5-29.

23) G. F. Kennan, 1951. *American Diplomacy 1900-19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95-103.

24) H. Bull, 1977.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77-98.

25) C. R. Beitz, 1999. *Pol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3-66.

있다는 국제관계에서의 ‘의(righteousness)’와 ‘이(benefit)’의 통합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적으로 좋은 삶을 위한 국가와 국가관계 등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²⁶⁾

이상과 같은 가치론 차원에서의 쟁점은 결국 국익 추구에 가치 부여하느냐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으로는 특정 국가가 국익 추구를 위해 다른 국가들을 침략했을 때 이 사건을 용인하느냐 여부와 관련된 가치론을 넘어서, 비도덕적인 국익 추구 행위를 제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세계관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글은 현실의 문제를 이론적 견해로 확대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국익 또한 가치 중립적 개념일 수 없기에, 그 추구 행위에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은 순논리적이라는 것이다. 사실과 가치는 동전의 양면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다.²⁷⁾ 또 국가는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된 구조라는 점에서, 이 구조에 부여되는 인류 사회 차원에서의 가치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 가치는 특정 국가의 자국민만의 배타적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인류 공동체의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²⁸⁾ 이런 맥락에서 좋은 국익과 나쁜 국익은 평가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미래 세대와 지구적 공공성 등을 고려한 세계시민적 윤리가 될 수 있다.²⁹⁾

이렇게 국익을 둘러싼 쟁점을 메타 이론의 주요 차원 즉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봤을 때, 개념화와 유형화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로써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기한다. 첫째, 각 차원에서 대립되는 논점들을 대칭적으로 받아들일 논리적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즉 메타이론 차원에서 실증주의와 해석주의와 같은 기존 이론의 틀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존재론적 차원에서 국익의 실재를 인정하더라도 인식론 차원에서 국익에 대한 절대주의적 인식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메타 이론 차원의 주요 경향 외에 다른 대안적인 경향이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긍정해야지만 국익의 실체에 대한 접근을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상술한 논점을 토대로 이 글은 국익에 대한 ‘과학적인’ 개념화와 유형화를 진행

26) 박성우. 2011. “국익 추구의 도덕적 한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삶의 정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 21집 제2호, 1-22; Yan, Xuetong. 2011. *Ancient Chinese Thought, Modern Chinese Powe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38-69.

27) R. Bhaskar. 1986. *Scientific Realism and Human Emancipation*, London: Verso, 196-211.

28) A. Linklater. 1998.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Community: Ethical Foundations of the Post-Westphalian Era*,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46-76.

29) H. Patomäki. 2008. *The Political Economy of Global Security: War, Future Crises and Changes in Global Governance*, London: Routledge, 18-35; A. Sayer. 2011. *Why Things Matter to People: Social Science, Values and Ethical Lif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6-76.

하기 위해 존재론에서는 국익의 실재를 긍정하고, 인식론에서 국익에 대한 상대주의적 인식이 합리적이며, 가치론에서는 국익에 대한 가치 부여가 가능해야한다는 관점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한다.

Ⅲ. 국익의 개념화 및 유형화

여기에서는 제2장의 논의에 기반하여 본격적으로 국익에 대한 개념화와 유형화를 시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는 개념을 구성하는 차원(dimension)과 각 차원을 구성하는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차원들은 그 개수와 논리에 따라 평면적이거나 입체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명목 혹은 서열 등 변수의 성격을 설정하고, 역시 그 개수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그 이후 이 차원과 변수들을 배치하는 논리 즉 축의 설정을 통해 유형화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서 세부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의 커피를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 수 있다. 즉 커피는 커피 나무의 씨를 볶아 가루로 낸 것을 물 또는 증기로 우려내어 마시는 갈색의 음료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이 커피는 온도와 우유 첨가 여부 등 두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도에서는 뜨겁거나 차가운 것으로 구분하고, 우유 첨가 여부는 첨가와 불첨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차원 4변수를 교차하여 커피에 대한 유형화를 진행할 수 있다.

또 국익과 유사한 추상화 수준을 가진 개념을 예로 들면, 민주주의를 행위자 차원에서 엘리트의 행동과 구조 차원에서 정치 문화를 설정하고, 각각의 변수를 협력과 적대적 그리고 동질과 적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개념화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2차원 4변수를 교차 분류하여 4개의 세부 유형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유형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³⁰⁾

이 글에서는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상술한 방법에 따라, 기존의 관련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현 시기 한국 외교에 요구되는 개념화와 유형화를 그 주요 내용을 하는 국익 개념을 이론적으로 모색해본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서론에서 밝힌 개념화와 유형화를 의미하는 제2와 3단계에 해당된다. 제2장에서 이 글이 추구하는 국익 개념 재정립의 기본 관점은 이미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국익 재정립 과정에서 특별히 추가하여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과학적 엄밀성이다. 이 글에서는 이 과학적 엄밀성을 제

30) A. Lijphart. 1968. "Typologies of Democratic System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1, no.1, 3-44.

고하는 방향으로 국익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도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방향은 첫째, 가장 고차원 내지 다차원적인 개념화 및 유형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이 글은 국익도 민주주의 등 다른 사회과학 개념과 마찬가지로, 개념이 고차원 내지 다차원일수록 대상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더욱 과학적이라는 견해를 따른다는 의미이다.³¹⁾ 즉 이 글의 국익 개념화의 선택 기준은 다차원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 2장에서 논의한 바대로, 이 글은 인식론의 차원에서 국익 개념의 상대주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긍정한다. 이는 내재와 외재적 차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익 개념은 특정 국가의 내외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대표적인 예로써 중국을 들 있다. 중국의 발전에 따라 마오쩌둥, 덩샤오핑 그리고 시진핑 집권기의 국익의 개념이 생존 중심, 경제적 발전 중심 그리고 국제적 인정과 위신 추구 중심으로 변화되어왔다는 주장은 상기 논단의 적실성을 검증한 매우 적절한 사례이다.³²⁾

이런 측면에서 기존 국익 개념에 대한 연구는 크게 단차원과 다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단차원적인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현실주의 계열의 국익에 대한 견해이다. 현실주의계열의 학자들은 단차원으로 국익 개념을 구성한다. 즉 ‘생존(survival)’ 단일변수로써 국익을 정의하고, 경제적 번영이나 이념의 전파 등과 같은 요소는 생존의 부가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³³⁾ 물론 경제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의 이익을 국익의 구성요소로써 상정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핵심이라기 보다 부차적인 이익으로 간주하는 편향을 가진다.³⁴⁾ 즉 설사 생존 외에 다른 변수들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엄격한 위계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차원이기 때문에 분석 시 그 과학적 엄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국익은 국제 체제의 부정부적 구조에 의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편향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각 국가의 국익에 대한 유형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국익

31) Gary, Goertz. 2006. *Social Science Concepts: A User's Guid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35-50; Michael, et al Coppedge. 2016. "Measuring High Level Democratic Principles using the V-Dem Dat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37, no.5, 580-593.

32) Yongnian, Zheng. 1999. *Discovering Chinese Nationalism in China: Modernization 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3) Kenneth, N. Waltz.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91-92.

34) Stephen, D Krasner. 1978. *Defending the National Interest: Raw Materials Investments and U.S.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35; Robert, Gilpin.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25; 阎学通. 1996. 『中国国家利益分析』,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37-142; John, J. Mearsheimer.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55-60.

개념에 대한 절대주의적 인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관점에 입각한 국익 개념은 현 시기 한국의 국익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에는 그 효용가치가 매우 낮다고 평가한다.

다음으로, 국익을 다차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견해가 있다. 2차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견해들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하나는 2차원 4변수법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국익은 물질과 사회적 두 차원으로 구성되고, 물질적 욕구차원에서는 국가의 영토와 국민의 보전 등의 물리적 생존과 생산양식의 유지와 성장을 의미하는 경제적 복지 등이, 사회적 욕구 차원에서는 자주적인 정책 결정 능력을 지표로 하는 자율성과 국제사회에서의 인정과 위신 등을 포함하는 집단적 자존감 등이 각각 변수로 설정될 수 있다.³⁵⁾ 따라서 이 견해를 기반으로 유형화를 진행하면 <표 1>과 같이 2차원 4변수의 교차 조합에 따라 2×2 매트릭스가 가능하다.

<표 1> 2차원 4변수 국익 개념화 및 유형화

물질적 욕구

		약	강
사 회 적 욕 구	강	수정주의형	패권 지향형
	약	생존 위기형	실리 추구형

참조: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함.

한편 이 견해는 국가를 단순한 은유적 상징이 아니라 욕구와 인지 능력을 가진 실재하는 인격체로써 규정하기 때문에, 이 인격체의 발전 상황에 따라 이익간의 관계 역시 변화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³⁶⁾ 따라서 국가 발전 상황에 따라 상기한 <표 1>의 각 국익 유형들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형 국익이 각

35) A. Wendt,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3-238.

36) A. Wendt,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15-224.

각 생존 위기형, 실리추구형과 수정주의형, 그리고 패권지향형으로 각각 대응될 수 있다. 상술한 중국을 예로 들면, 마오쩌둥 집권기에는 생존 위기형, 덩샤오핑과 장쩌민 집권기에는 실리추구형 그리고 후진타오 집권기에는 수정주의형, 마지막으로 시진핑 집권기에는 패권지향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는 성장과 발전 정도에 따라 국익이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점은 이 2차원 4 변수법은 과학적 엄밀성과 국익 개념의 상대주의적 인식 가능성 차원 모두에서 이 글의 목적인 한국의 국익 재정립 과정에서 그 참고 가능성이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른 하나는 2차원 8변수법이다. 즉 무엇이 중요한가에 관련된 즉 중요성의 강도의 차원에서 국익을 국가 파멸의 위기를 동반하고 즉각적 무력 대응을 요구한 생존적(suival), 심각한 국익 손상이 예상되어 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사활적(vital), 상당한 국익 손상이 우려되나 외교적 타협이 가능한 주요(major),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관심 표명 정도의 필요한 주변적(peripehral) 국익으로 구분하고, 무엇에 대한 이익인가에 관련된 즉 그 영역의 차원에서 국방(defense of homeland), 경제(economic well-being), 세계질서(world order), 이념적(ideological) 국익으로 나눈 것이다. 또 전자는 서열로 후자는 명목 변수로 구성했다. 각 명목변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정도가 서열화되고 있다.³⁷⁾ 이 모델은 현존하는 국익 관련 유형법 중 가장 고차원이며, 또 시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국익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시대 상황의 변화나 사안에 따라 영역 차원의 변수간의 중요성이 변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이라는 의미이다.³⁸⁾ 한편 이 견해에 따르면, 국익은 4×4의 매트릭스로 유형화시킬 수 있다.(〈표 2〉 참고)

부연하자면, 〈표 2〉에서 각 영역은 그 중요성의 차이에 따라 다른 유형의 이익이 된다. 즉 국방 영역의 이익은 그 중요성에 따라 순서대로 D-①에서 D-④까지 세분화된다. D-①은 영토의 안정성과 주권의 물리적 파괴에 직면한 전면적 상황의 존재론적(existential) 혹은 국가 존망(national peril)형, D-②는 동맹의 확장억제와 핵심 완충지대 방어 성격의 임계 전략(critical strategic) 내지 전략적 방위(strategic defense)형, D-③는 우발적 충돌 방지와 잠재적 위협관리에 초점을 맞춘 지역안정 관리(regional stability management) 혹은 안보 관리(security management)형, D-④는 초국경 범죄와 대테러 등 비전통 안보

37) Donald, E. Nuechterlein, 1973. *United States National Interests in a Changing World*,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Donald, E. Nuechterlein, 1976. "National Interests and Foreign Policy: A Conceptual Framework",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20, no.2, 246-266.

38) Laura, Neack. 2019. *The New Politics of Foreign Policy*, (4th ed.), London: Sage Publications, 26-53.

가 중시되는 저강도 안보(low-intensity security) 내지 예방적 경계(general observation) 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표 2〉 2차원 8변수 국익 개념화 및 유형화

중요성(Intensity) 영역(Sector)	생존	사할	주요	주변
국방(Defense)	D-①	D-②	D-③	D-④
경제(Economic Well-being)	E-①	E-②	E-③	E-④
세계질서(World Order)	W-①	W-②	W-③	W-④
이념(Ideology)	I-①	I-②	I-③	I-④

참조: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함.

경제 영역의 이익 역시 그 중요성에 따라 기반 시설 붕괴와 더불어 국가 기능이 마비되거나 대량 아사 사태가 예견되는 체제적 경제생존(systemic economic survival)과 경제 붕괴(economic collapse)형의 E-①, 전략적인 공급망과 기술 패권을 수호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전략적 경제안보(strategic economic security) 혹은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형의 E-②, 시장 접근성의 확대와 무역 수지 개선 및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이 중요한 거시 통상번영(macro-commercial prosperity) 혹은 통상 번영(commercial prosperity)형인 E-③, 개별 기업의 애로 해소 및 관광과 인적 교류 활성화 지원 등의 핵심 정책이 되는 민간조력(private sector facilitation) 내지 부가이익(minor gain)형인 E-④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교의 자율성과 적극성 정도를 의미하는 세계 질서 차원에서도 W-①는 세계대전 등 질서 자체에 대한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형성되는 체제 보전(system preservation) 내지 체제 위기(system crisis)형, W-②는 적대적 패권 저지와 동맹 네트워크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경우의 지정학적 균형(geostrategic balancing) 혹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형, W-③는 국제기구 및 지역 협의체의 활성화가 핵심인 다자 거버넌스(multilateral

governance) 내지 외교 관여(diplomatic engagement)형, W-④은 국제법과 규범 준수 그리고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기여에 중시되는 규범적 관여(normative engagement) 혹은 의례적 참여(formal participation)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념적 차원에서도 강제 개종과 민족 말살 그리고 혁명에 의한 체제 전복 위협에 의해 국가 정체성 및 헌법적 가치의 파괴를 저지해야하는 정체성 수호(identity preservation) 혹은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형의 I-①, 인권 탄압 중단 압박과 민주주의 체제 방어 등을 통해 가치공유국과의 블록 형성 및 체제 경쟁을 진행하는 가치 수호(value defense) 내지 이념적 연대(ideological solidarity)형인 I-②,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 민주화 지원과 공적개발원조 및 문화 전파 등 가치 증진(value promotion) 혹은 소프트파워 투사(soft power projection)형인 I-③,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지지와 타국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을 하면서 문화 교류 증진하는 선언적 가치(declaratory value) 혹은 선언적 외교(declaratory diplomacy)형인 I-④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모델에 따르면 특정 시기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유형화할 때 그 상술한 다른 모델들과는 달리, 두 차원이 한 차원은 서열 변수이지만 사실상 구간 변수이고, 다른 한 차원은 명목 변수이므로 세부 유형이 각 영역 변수마다 4 등급의 값을 가지는 구조이므로, $4 \times 4 \times 4 \times 4$ 즉 256가지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우의 수가 많은 모델이 설명력은 높지만 이론화 정도는 낮아질 수 있다는 소위 이론화가 추구해야 하는 ‘간결성(parsimony)’ 위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³⁹⁾

상술한 논의를 종합하면, 국익 개념의 정립을 위해 진행한 대표적인 모델에 대한 검토 결과 2차원 4변수 모델이 한국 국익 재정립을 위해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이 글은 판단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존하는 국익에 대한 개념화 및 유형화 모델 중 가장 고차원-다변수이다. 따라서 한국 국익 재정립 과정의 과학적 엄밀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론화 정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국익과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이 모델은 국익 개념의 복잡성과 동태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새로운 시기와 국면에서의 한국 국익 재정립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동태적 유형화에 대한 관점은 상술한 2차원 4변수 모델에서도 공유하는 바이다. 특히 2차원 4변수 모델은 국가 발전 단계와 국익 개념과의 논리적인 대응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 의의가 높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국익의 변화는 ‘선형(liner)’보다는 ‘비선형(non-

39) King, Gary, Robert O. Keohane and Sidney Verba.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9-30.

liner)’적 발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회 현상에 속한다는 점에서 변화의 향방을 예단하지 않고 열어두고 있는 2차원 8변수 모델이 국익 변화에 대한 분석에 더욱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결국 국익은 위의 영역 파트의 4변수 즉 국방, 경제, 세계질서, 이념은 핵심적 구성요소이며, 이들 각각에 대한 중요성 차원의 4변수와와의 조합에 의해 특정 시기 국가의 국익 개념은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론이나 모델을 설계할 때 동일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가장 단순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간결성 측면에서 이 2차원 8변수 모델은 비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익에 대한 공시뿐만 아니라 통시적 차원에서의 개념화 및 유형화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간결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종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익이라는 개념의 실재를 얼마나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가에 따라 그 간결성의 수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과 같이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총체적 성격과 목표를 의미하는 국익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과도한 간결성은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고 이 글은 판단한다. 더구나 국방, 경제, 세계질서 그리고 이데올로기 등 개별 영역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변수의 의도적 축소를 통한 간결성의 확보는 이 모델에서도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도 이 모델이 가지는 장점 중의 하나이다.

IV. 결론

이 글은 대내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높아진 한국의 국익 재정립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시론적 논의이다. 한국의 국익은 대내적으로 그 체제 특성상 논리적으로 동태적으로 변화 가능한 개념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더구나 대외적으로 그 불확정성과 질서내의 원심력의 증가가 극대화되고 있는 현 세계질서는 거래주의 속성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발전의 좌표를 의미하는 국익의 명확한 정립은 그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한국의 국익 재정립의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단계 전략을 제안한다. 각각 국익에 대한 메타이론적 관점 확립, 개념화 그리고 유형화이다. 1단계 메타이론 차원에서 국익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재론적 존재론, 상대주의적 인식론 그리고 가치 부여 가능의 가치론을 그 재정립의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비교정치 영역에서 매우 효과적임 개념 정립 방법인 좌표축을 설정하는 개념화와 그 좌표축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유형화를 결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념화를

제2단계, 유형화를 제3단계로 설정 및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대표적인 국익에 대한 개념 및 유형화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1단계에서 제시한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논의 결과, 영역과 중요성의 2차원, 영역차원에서는 국방, 경제, 세계질서, 정체성 등 4개 그리고 중요성 차원에서는 생존, 사활, 주요, 주변 등 4개 변수를 설정하고 있는 모델이 과학적 엄밀성과 이 글이 제시하고 있는 국익 재정립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이 2차원 8변수 모델로써 한국 국익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구상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먼저 각 영역별 변수별로 국가 한국이 추구해야할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이 목표 설정에 반드시 선제되어야할 것은 해당 시기 세계질서의 변화의 흐름과 유사 수준의 주요국의 대응 양태에 대한 분석이다. 그래야지만 국익이 일정한 주관성을 가지는 개념이기는 아니지만 객관성을 일정정도 담보할 수 있다. 영역별 목표 설정에 이어 이 영역별 목표 추진과 관련된 중요성을 설정한다. 상술했듯이 그 단계는 생존, 사활, 주요, 주변 등 4단계이다. 예를 들면, 국방측면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갈등 수준 약화와 역내 충돌과 위협 관리를 목표로 삼는다. 또 그 중요성의 단계는 사활로 정한다. <표 2>에서의 D-③이다. 경제적 차원에서 자원과 기술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경제안보형 이익 추구를 목표로 삼고, 그 중요성을 사활 단계로 설정한다. <표 2>에 따르면 E-②이다. 세계질서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국제기구와 지역 협의체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중요성은 주요 단계로 설정한다. <표 2>에서는 W-③이다. 이념적 차원에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적개발원조 및 문화 전파 등 가치 증진과 소프트파워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또 그 중요성은 주요 단계로 정한다. <표 2>에서는 I-③이다. 이렇게 한국의 특정 시기 국익은 D-③, E-②, W-③, I-③의 조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 이 글의 논의 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학술 및 정책적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술적 측면에서 국익과 관련된 이론화와 관련되어 의의가 있다. 근거 없는 객관화와 한계 없는 상대화로 그 과학적 가치가 상당히 훼손된 국익에 대한 이론화를 개념화와 유형화를 통해서 시론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있는 개념으로써 국익을 규정했다. 또 현존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분류법을 제안함으로써 현존하는 국익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국익 재정립의 실효적인 방법론 구축 측면에서 진전을 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차원별 변수의 구

분 및 측정 기준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명목적 성격을 가지는 영역별 변수 보다 서열적 성격을 가지는 중요성 차원의 변수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필수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잠정적으로 통시와 공시 비교 사례연구를 통해 가장 대표적인 사례와 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역으로 구분 및 측정할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경험적 그리고 실증적 비교 사례연구는 향후 연구의 과제로 매우 중요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무엇보다 만약 이 글의 제안에 따라 국익이 설정된다면, 관련 논쟁의 추상화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상술했듯이 국익은 정부의 교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개념이다.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근거가 되는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 근거에 대한 분석이다. 따라서 국익의 변화는 선언적이거나 추상적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분석과 근거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구체적인 분석과 근거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동반되기에 결과적으로 국익 논의 대중화와 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그 평가에 있어서도 논리적으로 구체적인 영역 및 중요성 변수에 대한 판단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증거 기반적 성격이 강화될 수 있다.

향후 한국의 국익에 대한 재정립 과정은 정기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자체가 국격 제고와 더불어 국가 능력의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요국의 국익 설정 과정과 정리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한국 국익 재정립 작업의 제도 및 인식 차원에서 그 구체적인 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시에 국익의 재정립 과정의 방법론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고민을 통해 이 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과 같은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 엘리트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국익 재정립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과 제시는 당위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재적 차원에서도 특정 시기 국익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통한 국민통합정도 제고와 정책 집행의 신뢰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가안보실. 2023.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서울: 국가안보실.
- 김동은. 2020. “한국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 비교 연구: 체계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의정논총』, 제15권 제1호, 한국의정연구회.
- 김우상. 2013. 『신한국책략 3.0: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선택』, 서울: 수막새.
- 곽은경. 2025.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역대정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11권 제2호,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 대한민국 정부. 2025.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정부.
- 박성우. 2011. “국익 추구의 도덕적 한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삶의 정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1집 제2호.
- 이태규. “실용이란 유령에서 벗어나기 (2025.06.3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3017490002646>(검색일: 2025.11.03.).
- 이춘근. 2002. “국가이익의 개념과 한국의 국가이익”, 『국가전략』, 제8권 제1호.
- 한용섭. 2025. “역대 한국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비교·분석과 개선방향”, 『국가전략』, 제31권 제1호, 세종연구소.
- “시험대 오른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2026.01.03.)”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4778>(검색일: 2026.01.05.).
- Acharya, Amitav. 2018. *The End of American World Order*, Cambridge: Polity Press.
- Bhaskar, R. 1986. *Scientific Realism and Human Emancipation*, London: Verso.
- Bailey, K. D. 1994. *Typologies and Taxonomies: An Introduction to Classification Techniques*, New York: Sage Publications.
- Beitz, C. R. 1999. *Politic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ull, H. 1977.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oppedge, Michael et al. 2016. “Measuring High Level Democratic Principles using the V-Dem Dat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37, no 5.
- Elder-Vass, D. 2015. “Of Babies and Bathwater. A Review of Tuukka Kaidesoja Naturalizing Critical Realist Social Ontology”, *Journal of Social Ontology*, Vol.1, no.2.
- Gilpin, Robert.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ertz, Gary. 2006. *Social Science Concepts: A User's Guid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ass, Richard N. 2017. “The Age of Nonpolarity: What Will Follow U.S. Dominance”, *Foreign Affairs*, Vol.87, no.3.
- Jackson, P. T. 2011. *The Conduct of Inqui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hilosophy of Sci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Worl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 Joseph, J. 2012. *The Social in the Global: Social Theory, Governmentality and Glob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nan, G. F. 1951. *American Diplomacy 1900~19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ng Gary, Robert O. Keohane and Sidney Verba.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asner, Stephen D. 1978. *Defending the National Interest: Raw Materials Investments and U.S.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urki, M. 2008. *Caus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claiming Causal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ul F, Lazarsfeld. 1937. "The Use of Detailed Interviews in Market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Vol.2, no.1.
- Lijphart, A. 1968. "Typologies of Democratic System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1, no.1.
- Lijphart, A. 1977. *Democracy in Plural Societies: A Comparative Explor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nklater, A. 1988.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Community: Ethical Foundations of the Post-Westphalian Era*,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McNally, Christopher A. "Trade War 2.0?(2020.5.27.)." 『CHINAUSFocus』, <https://www.chinausfocus.com/finance-economy/trade-war-20->(검색일: 2023.5.12.).
- Mearsheimer, John J.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Mearsheimer, John J. 2021. "The Inevitable Rivalry: America, China, and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Foreign Affairs*, Vol.100, no.6.
- McKinney, John C. 1969. "Typification, Typologies, and Sociological Theory", *Social Forces*, Vol.48, no.1.
- Morgenthau, H. J. 1973.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5th ed.), New York: Alfred A. Knopf.
- Neack, Laura. 2019. *The New Politics of Foreign Policy*(4th ed), London: Sage Publications.
- Nuechterlein, Donald E. 1973. *United States National Interests in a Changing World*,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Nuechterlein, Donald E. 1976. "National Interests and Foreign Policy: A Conceptual Framework",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20, no.2.
- Patomäki, H. 2008. *The Political Economy of Global Security: War, Future Crises and Changes in Global Governance*, London: Routledge.
- Rosenau, J. N. 1971.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New York: The Free Press.
- Satoru, Mori. 2025.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s Foreign Engagement and Its Geostrategy Toward the Four Regions", *Asia-Pacific Review*, Vol.32, no.1.
- Sayer, A. 2011. *Why Things Matter to People: Social Science, Values and Ethical Lif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 Weldes, J. 1996. "Constructing National Interest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2, no.3.

- Wendt, A.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ght, C. 2006. *Agents, Structur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s as Ont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lfers, A. 1962. *Discord and Collaboration: Essays on International Politic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 Yan, Xuetong. 2011. *Ancient Chinese Thought, Modern Chinese Powe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Zheng, Yongnian. 1999. *Discovering Chinese Nationalism in China: Modernization, 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秦亚青. 2012. 『关系与过程：中国国际关系理论的文化建构』,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阎学通. 1996. 『中国国家利益分析』,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Abstract 】

A Thesis for Redefining the Concept of Korean National Interest

Joo, JangHwan

In South Korea, a system where political parties pursuing different ideologies and policies can come to power, are the national interests advocated by the different ruling parties the same or different? If they are the same, it is illogical. If they are different, it is unclear what their true nature is. This article is designed to address the second issue. More specifically, it aims to establish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redefining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

This article seeks to secur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redefining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 through a three-step process. The first step is to organize the meta-theoretical issues surrounding national interest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redefinition and to spec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 of national interest that this article seeks to establish. This step is primarily addressed in Chapter 2. Building on the fundamental view of national interest outlined in Chapter 2, Chapter 3 proceeds with the second and third steps: conceptualization and typification. This paper is based on the view that these two conceptualizations and typologies serve as bridges through which specific concepts, or ideal types, can interact with real-world cases. Therefore, conceptualization establishes the coordinate axes, or attribute space, on which the object of analysis is located, while typology is understood as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this attribute space through combinations of attributes. Accordingly,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representative existing conceptualizations and typologies of national interests, this paper selects and presents an optimized model for redefining Korea's national interests, namely the two-dimensional eight-variable method.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discussion and arguments of this paper and draws out their implications. Furthermore, it formalizes specific tasks for future research related to

大韓政治學會報(第34輯 2號)

redefining Korea's national interests.

Key Words : South Korea, national interest, redefinition, conceptualization, typology,
two-dimensional eight-variable method

• 논문투고일 : 2026년 4월 15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6년 5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5월 20일